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체중조절, 식사 대용, 비만, 칼로리, 규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체중조절, 식사 대용, 비만, 칼로리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5. 20.
체중조절용 식품, 비만
예방할 수 있다

2016. 6. 25.
체중조절용 식품,
소비자 고려해야

2016. 8. 25
EU, 체중조절용 식품의
강화된 규제 채택

2016. 9. 9
다이어트 식품 제조사,
개정안에 환영 입장 밝혀

핵심이슈
도출

“EU, 체중조절용 식품의 규제 강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EU, 체중조절용 식품의 규제 강화

2016년 8월 25일, 체중조절용 식품의 규제를 강화한 규정 EU 2016/1413이 유럽연합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 of EU)을 통해 채택되었다.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내 체중조절용 식품의 허용 성분과 칼로리를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 EU 2016/1413은 만일 '체중조절에 기여하는 에너지 조절 식사 대용품'임을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된 제품일 경우, 기존에는 200~400 Kcal까지 허용했던 칼로리 최대 허용치를 200~250 Kcal까지만 허용하도록 대폭 낮추었다. 또한,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체중조절용 식품 규제 강화는 높아지고 있는 유럽연합 내 비만율과 소비자 알 권리를 고려한 정책으로, 기존에는 칼로리가 높아 효과가 미미했거나, 영양분 함량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 체중조절이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채택된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은 건강한 체중조절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새로운 규정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유럽 내 체중조절용 식품 제조업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효능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체중조절용 식품의 기준이 엄격해져 유럽연합 내 비만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변경된 칼로리 및 영양성분 기준은 2019년 9월 14일부터 의무적용 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 유럽연합은 높아지고 있는 비만율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예로 '설탕세' 도입, 아동용 식품의 설탕 규제 강화 등 비만과 관련된 규제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체중조절용 식품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당국의 규제는 계속해서 마련될 전망이다. 유럽으로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유럽연합의 식품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채택된 유럽연합 규정 EU 2016/1413은 하기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6R1413>)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